

김 지사 “전북 현안에 힘 보태달라”

전북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21대 국회서 대공법
국립의전원법 통과” 촉구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현안 해결에 ‘공감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4일 전북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전북 주요 현안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전북은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으나 제22대 총선으로 인해 국회 업무가 미뤄지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5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인해 전북 주요 현안 과제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제21대 전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국가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강성희·신영대·한병도·윤준병·이원택·정운천 의원 등 6명의 전북 의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전북 관련 법안, 2025년 국가 예산, 주요 현안 등이 다뤄졌다.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공법) 개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동학농민 명예회복법 개정’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을 완성하는 동력은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 지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제21대 전북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 전북 현안법안 통과 및 현안 해결 논의를 갖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법 제정은 필수요료와 지역의료분야에서 중시할 수 있는 최적 인력 배출 대안으로서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도 김 지사는 지방을 발전시키는 다양한 전략이 있으나 교통분야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하고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전략에서도 대공법 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4년동안 전북을 위한 마음으로 함께 뛰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튼튼한 뼈대를 세우고 전북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한 ‘새만금 SOC 신속 재개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고 사업추진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 핵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국비 확보와 신규 반영이 중요한 만큼 전북 국회의원 깊은 관심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전북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한 뼈대를 세우고 전북 경제를 견인할

지 함께 힘을 모아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국회에서 못하면 지체없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은 “민선 8기 협치 공식화에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많은 성과를 냈다”며 “5월까지 한두가지는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또 22대 국회에서도 원팀을 강조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성희 의원은 “민주당 10석도 있지만 다른 당 목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 등 전북 관련원 일이라면 모두가 힘을 합쳐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민주, 조국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 사실상 거절 조국혁신당 “깊이 고민해달라”

민주 “여야 영수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만남”
조국 “안타깝고 섭섭해...깊게 고민해보고 답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에 대해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깊이 고민해보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의 연석회의 제안에 대한 공식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여야 영수회담은 (윤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야당의 목소리 듣는다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 대표와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냐”라며 “대통령이 여러 창구를 통해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야권 연석회의 소집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조 대표의 제안에 선을 그은 것은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2일 전북 전주 그랜드힐스테이트호텔에서 열린 ‘전북총선승리보고대회’에 참석해 “이 자리를 빌어 이 대표께 정중히 그리고 공개적

으로 제안한다.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달라”며 “이 대표가 범야권의 대표로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민주당이 얻은 176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 제안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대표의 제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읽힌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서 “조 대표의 제안을 공식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며 “영수회담 전에 보는 게 시기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서 조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깊이 고민해주고 이재명 대표께서 어떠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조 대표가 며칠 전 제안한 내용은 담담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만 가지 말고 야권의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범야권을 대표하는 대표로 가길 정중히 제안드린 것”이라며 “공식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몇몇 의원과 대변인께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안타깝고 섭섭하다”고 했다. /뉴스

완주군의회 임시회 개최... 행감특위 구성 결의안 등 처리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각종 조례안과 2024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제1분회의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면,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과 부위원장 선임을 하고, 30일 제2차 회의를 통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이수, 이주갑 의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의식, 이순덕 의원이 각각 5분자

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이며, 김재천 의원은 ‘지립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2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심부건)에서는 ‘완주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총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이수)에서는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남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그 밖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만큼 더욱 많은 군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수긍할 수 있는 심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염재훈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연금개혁 관련, 세대 갈등 부추기는 선동 멈춰라”

민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세대 간 갈등 조장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입성문을 통해 “공론조사 결과 발표 후 몇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면 ‘5060이 MZ세대 돈 뺏어 간다’, ‘연금개혁안 2030 분봉’, ‘개편안에 빨간 2030’, ‘더 내고 더 받는 개악’이라는 제목을 달아 온통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실제 공론조사 응답 분석자료를 보면, 18~29세의

비난 일색”이라며 “소위 ‘전문가’들까지 가세해 2030세대의 숫자가 적어 제대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경우 소득보장 강화안이 53.2%, 재정안정 강화안이 44.9%로 오히려 소득보장이 높게 나타났다”며 “60세 이상의 경우, 소득보장이 48.4% 재정안정이 49.4%로 재정안정이 근소한 차이로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에서 재정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고, 연금 고갈에 대해 우려하는 20대에서 소득 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를 의외”라면서 “하지만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숙의토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소득보장이 72.3% 재정안정이 25.4%로 소득보장이 앞섰고 광주·전라·제주도 경우 소득보장 61.7% 재정안정 38.3%로 소득보장이 앞섰다”며 “이를 보면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연금개혁에 대해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더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